

첨단인재 지원금 수도권행...전남광주 몫 고작 ‘1%’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 지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남광주 지원 규모는 전국 대비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훈련기관과 분야별 교육 실적에서도 격차가 확인된 데다 전국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비중도 사업 초기보다 낮아져 지역의 실습기반 확충과 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DT 훈련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4759억8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광

주 소재 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54억700만원으로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관에는 전체의 93.9%인 4467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에만 3939억5300만원이 지원, 전국 지원금의 8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전체 지원금은 292억3600만원으로 6.1%에 그쳤다.

KDT는 민간 훈련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하는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둔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수도권에 몰려

전국 훈련기관에 4759억원 지급...지역 기관엔 54억원 수도권에 94% 집중...‘실습기반 확충·취업 지원’ 과제

있었다. 지난해 전국 KDT 훈련기관 341곳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191곳, 경기 54곳, 인천 11곳 등 256곳으로 75.1%를 차지했다.

전남광주는 광주 8곳, 전남 2곳 등 총 10곳으로 전국의 2.9% 수준이었다. 기관 주소지 기준 훈련 참여인원은 광주 1031명, 전남 529명 등 1560명이었다.

분야별 훈련 실적에서도 지역의 교육기관 격차가 드러났다. 지난해 전남광주 훈련기

관의 AI 분야 참여인원은 317명으로 전국 9619명의 3.3%에 그쳤다. 빅데이터 분야는 352명으로 전국 6857명의 5.1%였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전남광주 참여인원이 집계되지 않았다. 전국 클라우드 훈련 참여인원 4555명 가운데 수도권은 4426명으로 97.2%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분야 참여인원도 20명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비대

면 실시간 교육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기관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비와 실습환경이 필요한 로봇·사물인터넷·스마트제조 등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KDT 취업률은 2022년 62.6%에서 2023년 54.0%로 떨어진 뒤 2024년 54.2%, 지난해 55.9%로 반등했지만 2022년보다 여전히 6.7%p 낮았다.

취업자 가운데 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중은 2022년 78.0%에서 2023년 74.4%, 2024년 69.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취업

여부뿐 아니라 훈련에서 익힌 기술을 실제 일자리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어기규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를 전국에서 키우겠다면서 훈련기관과 지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수업을 열어놓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방에서도 충분한 실습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훈련과 공동 실습시설을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기관은 교육 내용과 취업 지원체계를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남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분담·전기료 선납 ‘도마’

1단계 구축비 1조4000억원...한전 “삼성·SK가 80% 부담”

25조원 제안 무산...사채 발행한도 축소 앞두고 재원 고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 분담과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이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수요기업을 위한 전용 설비인 만큼 기업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전기요금 선납은 사채 발행한도 축소에 대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 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이 전체 비용의 80%를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두 기업을 위한 전용 전력설비라는 점을 비용 분담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국가 지원 여부에 따라 부담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자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이 추진한 전기요금 선납 방안도 질의 대상이 됐다.

김도읍 의원의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제안 이유를 물었다. 앞서 한전은 두 기업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총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확보한 자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에 활용하려는 구상이었지만 기업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김재균 한전 전력계통본부사장은 사채 발행한도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허용된 발행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상 사채 발행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이를 5배까지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된다. 한전은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면서 특례 종료 이후의 자금 조달 여력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 사장은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두 기업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쌓인 수익금 ‘수두룩’

광주 첨단·전남 여수·대불 5개 과제로 6억원 미사용

전남광주지역 스마트그린산단 기업지원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가운데 6억여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운영과 장비 유지보수 등을 대비해 적립한 자금인데, 전국적으로 수익금이 장기간 누적되거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역에서

도 사용계획과 집행현황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단 미사용 수익금 보유 15개 과제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은 광주첨단 2개, 전남여수 2개, 대불 1개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의 미사용 잔액을 합산하면 6억1669만원이다. 전국 미사용 수익금의 14.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전남이 6억409만원, 광주가 1259만원이다.

미사용 잔액은 여수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다. 여수 소부장지원센터가 3억9049만원,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가 4533만원으로 두 과제에서 총 4억358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여수 소부장지원센터는 장비의 안정적 인 운영과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수익금을 적립·관리하고 있다. 대불 조선해양구조물 사업의 미사용 잔액은 1억6826만원이다. 시설·장비 운영과 기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 중이며,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광주첨단에서는통합관제센터에320만원, 소부장지원센터에939만원이 남아 있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 마른김 가공공장, 기반시설 확충 시급

전국 313개소 중 239곳 집중...용수·위생 등 취약

생산 여건 등 고려, 친환경 양식어가 직불제 개선도

마른김 가공공장이 집중하고 있는 전남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난 해소, 친환경 김 양식 직불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규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은 지난해 수출액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마른김 가공공장 313개소 중 239개소(7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며, 2025년 전남은 전국 마른김 생산량의 72%, 생산액의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남 가공공장 239개소 중 218개소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농업용 지하수를 김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수와 위생기반도 취약하다. 또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마른김 가공공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도 생산 규모에 따라 5~9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3교대 근무와 휴게·휴무 대체인력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12~21명으로 확대하고, 상수도·폐수처리시설·전용 저장시설 등을 집적화한 산업기반시설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김 양식어가에 대한 직불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1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지급방식이 기존 양식면적 기준에서 판매실적 기준으로 변경되고, 해조류 등의 지급한도가 어가당 3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친환경 김 양식의 생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실적 중심의 지급기준이 친환경 생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장흥 득량만에서는 친환경 김 양식이 낙지·새조개·피막 등 수산자원의 생산 기반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도 기여하고 있다. 일반 김 양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산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해수 순환이 제한적인 만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장려하면서 정작 친환경 생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급기준을 유지한다면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예산과 다른 양식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불이익의 우려 해소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투기·불법전용 여부·정책 안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창구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농업인 등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농지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농지는행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는행사업을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 간 연계를 통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운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환형 기자 pose007@gwangnam.co.kr